



주간통일정세 2012-20(2012.05.07~05.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2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담화 또 공개...두번째(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1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가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으며 이를 '강령적 노작(勞作)'이라고 평가함.
- 김 1위원장은 담화에서 "이번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토관리사상과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토관리사업의 방향과 과업을 제시함.
- 김 1위원장은 구체적 사업으로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품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려야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 등에 대한 원림녹화사업 등을 지시함.
- 또 토지관리와 보호사업, 간석지 개간, 토지정리사업,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통한 수림화·원림화, 물관리사업, 도로의 현대화·증량화·고속화, 수산자원 보호사업,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관리사업 등을 강조함.
- 김 1위원장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산림·지하자원 보호기간으로, 3월부터 7월까지를 유용동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나라의 자연보호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함.
- 북한은 이날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최영림 내각총리,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기남, 문경덕 당비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열었음.

● 김정은, 만경대유희장 관리부실 공개질타(종합)(5/9, 조선중앙통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놀이공원인 만경대유희장을 찾아 관리일꾼들에게 관리 잘못을 질타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9일 일제히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2계단 유희장의 배그네(바이킹선) 앞 구내도로가 심하게



- 깨진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질책한 것을 시작으로 유희장 구내의 원림 상태, 2중 회전관성열차(청룡열차), 유희기구의 도색상태, 물놀이장의 안전문제 등을 조목조목 질책하거나 지적했다고 북한매체들이 전함.
- 김1위원장은 특히 유희장 구내의 보도블록 사이로 잡풀이 돋아난 것을 보고 풀을 한포기 한포기 직접 뽑으며 "유희장이 이렇게 한심할 줄 생각도 못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소리"라며 격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매체들은 전함.
 - 그는 "일꾼들이 유희장을 돌아보고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기회에 인민들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경중을 울려야 하겠다"고 말했으며 "만경대유희장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빛내이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유희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도록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지시함.
 - 이날 만경대유희장 시찰에는 최룡해와 마원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라"(5/10, 라디오프레스(RP);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RP)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이 9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에 관한 회의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담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 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 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함.
 - 김정은은 또 "국토 관리와 환경 보호 부문에도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이 많다"며 "국토환경보호성과 해당 기관들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식량난 해결에 사활 건 김정은... '돌격전'(5/13,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식량 증산을 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돌격전'이 시작됐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조선에서 벼 모내기가 시작됐다"며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포전(논)에서 첫 벼모를 냈다"고 전했다.
 - 이날은 60년 전인 1952년 김일성 주석이 이 농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린 날이며,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예농장원(농민)'으로 등록된 원화협동농장은 이 '기념일'에 맞춰 모내기를 시작했다.



- 다음날인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모든 일꾼과 농업근로자, 농촌지원자들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대지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

● <북한단신> 김정은, 만수대 건설 지원자들에 감사(5/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수대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 감사를 받은 이들은 체육성 산하단위 부원 최효심, 대성지도국 부원 리철주, 중구역통계부 계산원 박정란, 광복지구상업중심 노동자 리봉숙, 인민대학습당 통계원 박경미 등임.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김일성 생일 100돌을 "지상최대의 명절로 경축했다"고 自祝하며 '중앙보고대회·열병식·축포야회 등 경축행사 진행 및 남포-평양 해수수송관 완공' 등 성과 강조 선전(5.7, 중통)
-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태양절이 안아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했음.
- 최영림 총리, 5.10 양책베아링공장 현지 요해(5.10, 중통·중방)
-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경대유회장 현지지도는 '밝은 사상관점·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적 계기, 모든 일꾼들은 영도자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5.12, 중통·노동신문/사설,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 김정은동향

- 5/8, 김정은 제1위원장, 5.8 저작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4.27) 발표(5.8,중통)
-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특성에 맞게 △ 토지관리와 보호사업, 간석지개간, 토지정리사업에 큰 힘을 △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 합리적으로 완성, 도로의 현대화·중량화·고속화 실현 △ 수산자원 보호위한 사업,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 다른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 활발히 등 강조
-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5.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5.8, 중통·중·평방)
- 최영림, 김정각, 김기남(김정은 제1위원장 저작 전달), 리명수, 문경덕, 로두철, 김인식(내각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보고) 등 참가
- 5/8, 김정은 제1위원장의 4.15연설을 각 단체에서 인용하는 사례는 '대외 및 대남자세가 최고영도자의 뜻과 의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조선의 진로(자주·선군·사회주의 길)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5.8,조선신보/새 바람이 분다, 제1위원장의 영도술-1)

나. 경제

● 北 올해 쌀 확보량 30만t 증가<FAO 보고서>(5/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 확보량이 작년보다 30만t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FAO는 7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200만t의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160만t과 수입 예정인 30만t, 그 외 외부원조 양을 합산한 수치로, 작년의 쌀 확보량 170만t보다 30만t 많은 양임.
- FAO 보고서는 2011년 추수철부터 2012년 여름까지 1년간 북한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작년의 64kg보다 8.3kg 많은 72.3kg으로 추정함.

● 北,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5/9, 좋은벗들)

- 북한이 지난 1월8일과 2월16일 당중앙 내부회의를 통해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9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4호)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 금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체 식량은 물론이고 수산물과 과일 등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우선 공



급하라"고 지시해 당중앙 내부회의를 거쳐 4월부터 이뤄짐.

- 수출금지 결정과정에 참여한 간부들은 식량난이 완화되고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수출금지 조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일러도 1~2년은 지나야 풀릴 것 같다"고 내다봄.

다. 군사

● 항공기·선박에 잇단 전파교란... '北특별행동?' (5/7, 연합뉴스; 평양방송; 노동신문)

- 북한이 '특별행동'을 예고한 지 2주가 지났지만 7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북한의 무력도발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매체들도 '명령만 기다린다' '성전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온다' 등과 같이 특별행동에 아직 돌입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연이어 내보내며 대남 위협만 계속하고 있음.
- 대외용 매체인 평양방송은 7일 '체제대결에 들뜬 정신병자의 귀변'이란 제목의 단평에서 "우리는 이미 역적패당을 깡그리 쓸어버리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통고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실천행동뿐"이라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전날 "우리는 이미 보수언론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 우리의 특별행동 대상으로 된다는 데 대해 통고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용매문가들이 동지를 틀고 있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모략보도의 본거지들을 복수전의 첫 과녁으로 정하고 성전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함.

● 北리영호, 군사대표단 이끌고 라오스 향발(5/8, 조선중앙통신)

- 리영호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개성지역서 GPS 교란전파 계속돼(5/1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까지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발사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음.
- 이 소식통은 "북한 개성지역에서 GPS 교란전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의 군용장비나 민간 장비의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음.
- 그는 "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정밀유도폭탄 등 핵심 장비는 미국 군전용 코드(P코드) 수신기를 달고 있어 북한의 GPS 교란전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서 "민간 항공기나 선박 등도 관성항법장비(INS) 등 다른 항법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교란전파가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북한 개성지역서 발사되는 GPS 교란전파는 지상과 해상은 60여km, 공중은 200여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사회·문화

- **北 '4월 축제'에도 식량배급은 종전 수준(5/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식량배급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의 축제기간인 4월에도 3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WFP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4월에 주민 한 명당 배급한 식량은 하루 400g으로 3월의 395g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식량 배급량은 WFP의 필수 권장량인 하루 600g의 66% 수준에 불과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지원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분배한 식량은 쌀과 옥수수를 섞은 혼합식으로, 지역에 따라 쌀과 옥수수를 2대 8 또는 3대 7 비율로 섞은 것"이라고 RFA에 전함.

- **1분기 탈북자 입국 전년比 급감(5/8, 연합뉴스)**
 - 통일부가 8일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36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6명)보다 200명이나 줄어든 수치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1분기 입국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9명, 여성은 247명으로 입국 탈북자의 67.5%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1월 160명(남 61명, 여 99명), 2월 90명(남 26명, 여 64명), 3월 116명(남 32명, 여 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1분기 입국 탈북자 수는 1월 179명, 2월 152명, 3월 235명이었음.

- **北,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첫 출전(5/9, 조선신보)**
 - 북한의 장애인들이 올해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14회 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선신보는 "조선장애자체육협회가 올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위한 준비를 다그친다"며 "그 일환으로 중국 장애자 체육인들과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고 전함.
 - 신문은 "3일 공동훈련에 참가하게 될 선수와 대표단 성원들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조선의 장애자 선수들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장애인체육촌에서 탁구, 수영, 풀판보링, 육상 등의 종목별 훈련과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힘.

- **北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국서 순회 공연(5/10, 길림신문)**
 - 북한의 5대 혁명가극 중 하나인 '꽃파는 처녀'가 이달 말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공연을 시작으로 베이징, 충칭(重慶) 등 중국 각지에서 순회 공연을 갖는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이 10일 보도함.
 - 첫 공연지인 창춘에서는 지린성 문화청의 특별요청에 따라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공연할 계획임.

- 공연에는 북한의 3대 가극단 중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이 참여하며 북한의 공훈배우, 우수인민예술가, 최고예술상 수상 배우를 포함한 180여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임.

● **北, 해외방송 차단 위해 하루 18시간 방해전파(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주민의 해외방송 청취를 막기 위해 하루 18시간까지 방해전파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북한 정보통신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인 마틴 윌리엄스씨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윌리엄스씨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언론 조사연구업체 '인터미디어'의 '북한의 언론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 자신이 매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이 매일 최대 18시간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국제방송에 방해전파를 보내는 데 많은 전기와 자원을 낭비하는 사실은 이들 방송이 북한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함.

● **北 "이상고온 지속, 평양 낮최고 27도"(5/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전반적 지방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30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낮 최고기온이 평양 27도, 평성 26.6도, 사리원 27.4도, 해주 26.7도, 개성 26.9도, 남포 22.2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힘.
- 통신은 "앞으로 5월 중순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오후츠크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서해안 지방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을 예상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통영의 딸' 신숙자 사망...北 유엔에 통보(종합)(5/8, 연합뉴스)**

- 북한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70)씨가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이런 내용을 담아 유엔에 보낸 A4 1장 분량의 답변서한을 공개함.
- 북한 당국은 서한에서 "(신씨의 남편) 오길남 씨가 가족을 버렸고 또 두



딸의 어머니(신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씨의 두 딸은 오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씨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함.

● **박의춘 외무상 이집트 도착(5/9, 평양방송)**

-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블럭불가담(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8일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9일 전함.
- 북한 대표단은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5일 평양을 떠남.

● **北김영남, 인니·싱가포르 방문 위해 출발(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에 앞서 6일 "김영남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초청에 의해 곧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함.
-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안정수 경공업상 등이 김영남을 수행했으며 비행장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허태권 경공업성 부상, 피트니 리안티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참사,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김영남 일행을 전송함.

● **북-중 '만포-지안(集安) 국경다리' 공동건설 조인(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만포-지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0일 평양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인식에서는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과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함.

● **日 납북피해단체, 자국 경찰에 北 고관 고발(5/10, 교도통신)**

- 일본인 납북문제 관련 단체가 북한 공작기관의 고위 관계자를 일본 경찰에 고발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납치 피해자기족 지원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회원들은 이날 일본인 납치를 지시한 혐의(국외이송 목적 약취)로 강해룡 북한 대외정보조사부 전 부부장 등 2명을 경시청 공안부에 고발함.
- 이 단체 가나가와 지부 대표로 고발인 중 한 명인 가와조에 도모유키(川添友幸)는 "(일본) 당국이 지난해 9월 (강 전 부부장을) 수배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납치의 전모를 밝히려고 고발했다"고 말함.



- **北 박의춘 외무상 "이중기준 합리화에 유엔 도용"(5/10, 조선중앙통신)**
 -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극소수 국가의 강권과 이중기준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유엔이 도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박 외무상은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서 "조선의 위성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따르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라며 "이번 사태는 유엔안보리가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中 원자바오, 한반도 긴장완화 촉구(5/13, 신화통신)**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관련된 각국의 지혜와 인내, 선의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
 -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원 총리는 3국 지도자들이 동북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해당 각국의 이해와 관련돼 있고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 원 총리는 이어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에서 냉전의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김영남, 印尼 친선방문 시작(5/13,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4일간의 친선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투쿠 파이즈사 대통령 외교관계 특별보좌관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 위원장의 방문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친선방문"이라며 "유도요노 대통령이 15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또 양국이 1961년 수교 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우의를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두 지도자가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기간에 부디오노 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회의장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의 '동해→일본해' 단독표기기도 (4.23~27,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무산)는 '△역사왜곡행위, △군국주의적 재침야망, △독도강탈 흉심'이라고 비난 경중(5.7, 중통/극악한 재침 야망의 발로)
- 미국의 방북 自國 언론들의 '북 장거리로켓 발사 보도 제한처사' 비난 및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의 '평정전략의 진퇴양난' 조소 (5.7, 중방/미국식 언론자유의 진면목·평정전략을 통해본 미국의 가공한 처지)
- 미국은 '북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식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핵문제 등 미국의 이중기준 반대투쟁' 선동(5.10, 중통·노동신문/이중기준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 北 박의춘(외무상) 대표단 단장, 5.9 뽐럭불가담(비동맹) 장관회의(이집트)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 장거리로켓 발사' 비난 의장 성명 채택 관련 "유엔은 극소수의 강권과 이중기준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5.11, 중통·중방)
- 北(리영호 총참모장) - 라오스(국방성 부상) 군사대표단 회담, 5.9 진행 및 리영호 단장의 라오스 수상 의례방문 등 동정 보도(5.10, 중통·중방)
 - 라오스 국방성, 5.9 연회 개최 및 라오스 국방상의 김정은 선물 리영호에게 전달 (5.10, 중통·중방)
- 김영남, 5.11 대통령궁전에서 싱가포르대통령과 회담 진행(5.12, 중통·중방)
- 미국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 등 "군사기지화 정책의 초점이 아시아로 돌려지고 있다"며, 이는 '세계제패야망 실현, 北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5.13, 중통·노동신문/미국의 아시아포위망형성 책동의 위험성)

나. 6자회담(북핵)

● 北조평통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핵억제력 강화"(5/10,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괴뢰패당과 미국 것들이 그 무슨 비용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의 선군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최후발악적 망동이며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라며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적대세력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마치 그 어떤 혜택이 차례질 것처럼 떠든다. 심지어는 위성을 남이 대신



쏟아져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도 한다"며 "우리 인민은 억만금의 돈이나 그보다 더 큰 무엇과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바꾸는 인민이 아니다"고 강조함.

● **美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종합)(5/12,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음.
-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랜드 포브스(버지니아) 의원만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랭크스 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역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음.
-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으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음.

● **軍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핵 해결에 부정적"(5/13, 연합뉴스)**

- 군당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



3. 대남정세

● 北 '현대家' 정몽준 이례적 맹비난(5/10,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대통령병에 환장이 된 친미주구 정몽준의 가소로운 녀드리란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간상배' '시정잡배'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정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음.
- 우리민족끼리는 "정몽준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망방을 꾀쳐댔다"며 "이자는 '북의 새로운 무력도발 가능성'이니 '시대착오적인 북의 세습체제'니 '북지도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악담을 불어댔다"고 공격함.
- 이 매체는 "정몽준이 이런 극악한 대결악담을 꾀쳐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지난 기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떠들며 보수패당의 대북정책을 적극 비호두둔하였고 그 대가로 이명박역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한나라당 대표노릇까지 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방미(북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대책협의 등) 및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개최 등 韓美 '대북정책공조' 대해 "그들의 위기의식과 동족대결광증"이라고 비난(5.7, 중통·노동신문·평방/선군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
- 우리 정부의 '北, 핵공격 판단 땀 선제타격' 작전계획 수립 관련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전면전쟁을 노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선제공격은 결코 韓美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위협(5.8, 중통·노동신문·평방/자멸을 재촉하는 선제타격홍계)
- 北 「조평통」 대변인, 5.10 韓美 정부 등 '북 장거리로켓 발사 비용 문제' 등 지적에 대해 '우리(北)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모독,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및 '핵억제력 강화' 역설 중통기자 대답(5.10, 중통)
 -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
- 李大통령의 어린이날 행사 발언(北은 말 잘 안듣는 나쁜 어린이 등)을 '反北광대극'으로 재차 비난(5.10, 중통·노동신문·평방/동심에 적의를 불어넣는 대결미치광이)
- 韓美 맥스-썬더훈련(5.7~18) 관련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도발행위, 원수들의 아성을 초토화해 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5.12, 중통·노동신문/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놀음)
- 우리 정부의 '선제타격작전계획' 공개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속 비난(5.13, 중통·민주조선/위험천만한 북침전쟁 각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조평통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핵억제력 강화"(5/10)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괴뢰패당과 미국 것들이 그 무슨 비용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의 선군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최후발악적 망동이며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대변인은 "적대세력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마치 그 어떤 혜택이 차례질 것처럼 떠든다. 심지어는 위성을 남이 대신 쏘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도 한다"며 "우리 인민은 억만금의 돈이나 그보다 더 큰 무엇과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바꾸는 인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軍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핵 해결에 부정적"(5/13)

- 군당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재래식 정밀타격 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1991년 미국 본토로 철수한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외 일각에서 거론돼 왔음. 최근 대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2013 국



방수권법 수정안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음.

-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mm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인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1991년까지 1천72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핵검증을 요구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북·미, '민생 기싸움'..새로운 전선 생기나>(5/10)

- 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이후 북한과 미국간에 민생 문제를 고리로 한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어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우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 정권이 굶주린 주민들을 돌보지는 않고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는 미사일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했다"고 비난했음. 국가의 기본임무인 '백성 먹여살리기'에 주력하라는 것임.
- 미국은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은 김정은 체제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도모할 지 주시하는 모습임. '김정일의 유혼'인 핵개발에 주력하는 것과 별개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함.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연설에서 "평양의 새 지도부는 아직 행로를 바꾸고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둘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음. 클린턴 장관은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 재합류하며, 국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은 그들을 환영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현지 외교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민생을 강조하는 최근 미 정부의 기류는 핵·미사일 문제에 치중돼있는 북미 협상국면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판단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음.
- 미국은 민생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도 최근들어 부쩍 자주 거론하고 있음. 최근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그리고 민간단체(NGO)등이 나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루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모습이 이를 잘 말해줌.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좌'가 재개될 경우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인권과 민생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대북 협상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이런 행보는 한국 정부외도 어느정도 호응을 맞춘 것으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미사일 한 번 쓰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체인지(Game Change)'라는 용어까지 동원하고 있음. '게임체인지'는 지난 2008년 미 대선 과정을 그린 정치칼럼니스트 존 하일먼의 저서 제목으로,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국면전환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음.
- 북한도 민생문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음. 지난달 1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담화내용을 보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대목이 나옴. 물론 '김정일 유훈'의 핵심인 선군노선도 강조되었지만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음을 알게 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 잘 알려진대로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각 주도로 실시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전력 있음. 이 때문에 북한 권력내부에서 내각의 역할이 약화되고 당이 경제정책까지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은의 담화'가 나왔다든 점에서 향후 내각의 역할 강화가 초래할 변화가 주목됨.
-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3차 핵실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될 경우 핵문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임.
- 외교소식통은 "북미 관계가 핵과 미사일 등 기존의 핵심소재에서 인권과 민생문제로 주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라면서 "북한도 미국과의 '통큰 협상'을 도모하려 한다면 민생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핵실험 등 전통적인 협상수단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리자오싱 방북 '확인' 꺼리는 배경>(5/9)

- 북한이 리자오싱(李肇星) 전(前)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방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9일 말을 얼버무렸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자오싱의) 이번 방문에 대해 유관상황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대답을 피했음. 취재



- 진이 더 물어볼 여지를 차단한 것임.
- 북한이 조만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데 중국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외견상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양새임.
 - 이번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의 방북도 북한의 보도로 알려졌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8일 리자오싱을 단장으로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친선대표단이 전날 평양을 찾았다고 전했다.
 - 사실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의 이번 방북은 이전과는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임. 우선 여전히 대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직을 맡고 있는 리자오싱이 '묘한' 시점에 북한을 찾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의 대내적인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는 가운데 2006년과 2009년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핵실험 로드맵을 밝힐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리자오싱의 방북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임.
 - 일각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북미 외교가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 북중 외교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절실한 가운데 리자오싱의 방북의 방북 의미를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사실 올초 북미 양국은 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우리농축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이른바 '2·29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북한 김정은 지도체제와의 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음. 그러나 이런 기대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참하게 깨졌음.
 - 거기에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추가했고 거기에 북한은 제3차 핵실험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또 미국이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북한 '포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한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위협에 한 목소리로 '강공'을 주문하고 있는 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핵문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임.
 -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음.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끓자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 그러고서 중국은 한·미·일과는 달리 북한을 감싸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양새임.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앓고는 있지만 직접 또는 간접 채널로 북한에 제3차 핵실험 '불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리들도 외교 현장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이 이미 두차례 플루토늄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금기시하는 농축우라늄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실제 북한이 농축우라늄



탄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서 중국이 곧장 북한을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 무엇보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돼온 북중 경협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리자오싱의 방북도 중국의 이런 현실인식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유엔 성명 동참으로 북중 간에 잠시 '균열'이 생겼었지만 지난달 하순 북한 노동당의 김영일 국제부장이 방중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특사외교로 봉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나아가 이번 리자오싱의 방북은 김정은 지도체제와의 좀 더 '밀도있는' 북중 접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관심의 초점은 리자오싱이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면담할 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음. 북한의 김영일 국제부장이 후 주석을 면담한 만큼 이번에는 리자오싱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난다면 서로 주고받는 특사외교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리자오싱을 접견한다면 추가적인 도발은 '유보'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외교 일선이 아닌 '2선'의 리자오싱 전인대 외사위 주임을 친선대표단 명목으로 보낸 것도 것도 북한 지도부와 정식 접촉하기보다는 분위기 탐색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중국 당국이 리자오싱의 방북을 포함한 북중접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 북-중 '만포-지안(集安) 국경다리' 공동건설 조인(5/10)

- 북한과 중국이 '만포-지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0일 평양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인식에서는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과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했음.
-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에 있는 북측 섬인 별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10월26일 중국측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음.
- 별등도는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고 면적은 약 25ha임.

라. 일·북 관계

● 日 남북피해단체, 자국 경찰에 北 고관 고발(5/10)

- 일본인 남북문제 관련 단체가 북한 공작기관의 고위 관계자를 일본 경



- 찰에 고발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음. 납치 피해자가족 지원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회원들은 이날 일본인 납치를 지시한 혐의(국외이송 목적 약취)로 강해룡 북한 대외정보조사부 전 부부장 등 2명을 경시청 공안부에 고발했음.
- 이 단체는 강 전 부부장이 1980년 6월 미야자키(宮崎) 해안에서 발생한 하라 다다아키(당시 43세)씨 납치 사건에 관련됐다고 보고 있음. 강 전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고, 나이는 80대로 추정됨.
- 이 단체 가나키와 지부 대표로 고발인 중 한 명인 가와조에 도모유키(川添友幸)는 "(일본) 당국이 지난해 9월 (강 전 부부장을) 수배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납치의 전모를 밝히려고 고발했다"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역대 최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실시(5/7)

-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실시함. 공군작전사령부는 미 7공군과 함께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12-1차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특히 이번 훈련은 적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및 공중급유 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을 위한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08년부터 시작된 맥스 썬더 훈련은 한미 공군이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연합훈련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을 벤치마킹한 것임. 이번 훈련은 한반도 서부 공역 등 일원에서 전쟁 초기 상황을 가정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주도하에 제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0대의 연합 공중전력이 참가함.
- 한국 측에서는 F-15K, KF-16 등 38대의 전투기가 훈련에 참가하고, 미국 측에서는 공중급유기인 KC-135를 포함한 22대 공중전력이 훈련에 투입돼 적 도발 원점 타격 및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함. 한미 조종사들은 7일 소속 부대의 전투기를 제1전투비행단으로 이동시키고, 지원요원들도 정비 및 비행지원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수송기에 싣고 본격적인 훈련 준비를 마쳤음.
- 훈련은 참가전력을 아군인 '블루 에어'(Blue Air, 청군)와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 홍군)로 나눠 임무계획부터 브리핑 및 실제 임부까지 양측이 서로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진행됨. 블루 에어는 한미 연합 공군이, 레드 에어는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가 전담하게 됨.
- 한미 연합 공군은 2주간의 훈련기간 동안 항공차단, 방어제공 등 공중



주요 작전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투탐색구조, 조종사 도피탈출, 공중재보급 훈련 등 지원작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함.

- 특히 항공차단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과 긴급항공차단작전에서는 식별된 적의 도발원점에 대해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음.
- 또한 항공기 폭격유도훈련 및 탐색구조훈련에는 특전사를 최초로 참가시키고, 해군 DDH-2/3급 구축함을 함대공 위협대응 훈련을 위해 가상적 함정 역할로 투입했으며, 작전 중인 특전사 팀에게는 수송기를 이용해 실제 보급품을 투하함. 전시 출격할 항공기가 피격 또는 기체 이상으로 적진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한 조종사 생환훈련 및 탐색구조 훈련에는 한측과 미측의 베테랑 생환교관들을 특전사와 함께 참여시켜 훈련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임.
-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반도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한미 공군 연합전력의 위용과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이번 훈련에는 방어제공작전과 연계한 조종사 공중급유 자격유지 및 교관승급 훈련도 진행됨. 실제 공중작전 임무 중에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공군 조종사가 공중급유 교관으로 승급하는 것도 최초임. 훈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5명의 조종사가 공중급유 교관으로 승급하게 됨.

● 美 "이란 원유수입, 한국과 '생산적' 협의"(5/8)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국 제재의 예외 적용과 관련, 한국과의 협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음. 미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미국법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 생산적인(close and productive)'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관련 협의에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가적인 결정은 추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수입 전면 금지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 실제로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양국 협의와 관련,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었음.
-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접촉 창구는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는 "구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국익 증진을 위해 북한과 주기적으로 접촉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돼온 비공식 외교경로인 이른바 '뉴욕채널'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 생물테러 방어 연습 실시(5/11)

- 한국과 미국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물관련 질병과 인위적 생물테러 위협에 대한 방어 연습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2)에는 양국 생물관련 50여개 정부기관의 전문가 190명이 참가함.
-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이 연습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자연발생 생물관련 질병과 인위적 생물테러 위협과 관련된 국가차원에서의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생물방어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연습은 실무과장급 차원의 상황조치훈련과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됨.

나. 한·중 관계

● 한·중 무용인들, 수교 20주년 맞아 기념행사(5/7)

-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무용학자와 무용가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함. '동방의 불꽃-한국의 춤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7일까지 주중한국문화원, 중앙민족대학, 베이징무도대학, 베이징사범대 등에서 학술심포지엄, 공연, 무용워크숍, 최승희 영상감상회 등으로 꾸며지게 됨.
- 행사총괄코디네이터인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두 나라는 문화적·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라며 "학술적 탐색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춤의 멋과 정신을 중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성부, 中 차세대 청소년 리더 100명 초청(5/8)

- 여성가족부는 중국 청소년 대표단 100명을 9-16일 한국에 초청한다고 8일 밝혔다.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는 2004년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5천200명이 상호 방문했음.
- 중국 청소년 대표단은 6월에 200명, 10월에 200명 등 올해 모두 500명이 방한할 예정임. 이 사업에 따라 지난 4월 한국 청소년 대표단 200명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8일간 중국을 방문한 바 있음.
- 이번 중국 청소년 대표단은 외교부 공무원, 기업인, 언론인, 교육인, 의



료인 등 중국 전역에서 선발된 차세대 리더들임. 이들은 방한기간에 여 성부에서 양국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환담하 고 환영만찬에 참석함. 이어 건국대, 충남 아산 외암 민속마을, 여수세 계박람회 중국관, 녹색성장체험관, 디지털파빌리온 IT 체험관, 삼성홍 보관, 스마트그리드단지,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제주도 등을 찾 아 한국문화를 체험할 예정임.

- 최관섭 여성부 청소년정책관은 "한중 청소년교류 사업이 양국 간의 이해 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물론 중국의 핵심 차세대 리더들이 한국을 잘 이 해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호 정서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 <한중 정상, '북한해법' 놓고 미묘한 입장차>(5/13)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3일 '북한 해법'을 둘러 싸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음.
-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끝낸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중·한·일은 반드시 책임 을 지고 있다"면서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화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총리는 "지금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 예방"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보여야 하며 대화 협상의 올바른 궤 도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민생에 대해 권유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나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 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는 한·중·일 3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음.
- 북한 해법을 놓고 원 총리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반면,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좀 더 강한 대응을 역설한 셈임.
-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음. 노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거듭된 심 각한 위협"이라며 "제재 및 실효성 향상 조치 등을 평가한다. 계속해서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중 정상 "양국 FTA 협상 진척 노력"(종합)(5/13)

- 한국과 중국은 13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통해 경제 통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 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음.
-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 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수교 후 20년간 정치·경 제·문화·인적교류 등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음.
-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틀이리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



- 상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분야를 신중하게 다뤄 FTA 협상을 진척시키기로 했음.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협상이 개시됐다"면서 "일부 민감한 농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제외한다든지 보호장치를 마련할 때 수준높은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말했다.
- 두 정상은 또 2015년 교역목표 3천억 달러의 조기 달성과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에너지·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양국에서 활동 중인 상대국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개막한 여수 박람회개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써 양 국민 간 우호친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고, 원 총리도 여수 박람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방위상 "韓日 정보보호협정 체결 진전"(5/8)

- 한국과 일본 간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이르면 이달 중 체결될 전망이다. 8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의하면 다니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일명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밝혔음. 한국군과 자위대 간 장비와 수송 작업 등에서 상호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현안인 두 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음. 교도통신은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은 자위대와 협력에 신중한 의견이 강하지만,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음.
- 김 국방장관은 작년 1월 서울에서 열린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양국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음.
-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 등의 군사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것임.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하는 내용임.



● "日,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해결책 유보"(5/9)

- 일본 정부가 이달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했으나 사전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에 의하면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조율해왔으며, 일본은 외무성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해 새로운 인도적 지원책 등을 모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음. 신문은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해결책의 공식 제안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작년 12월 교토(京都)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했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으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말했음.
- 일본은 과거 추진했다가 폐지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음.

● 뉴욕한인회 '위안부 기림비' 건립확대 추진(5/11)

- 미국 뉴욕한인회(회장 한창연)는 최근 일본이 뉴저지주(州) 팰리세이즈파크(팰팍)시를 방문해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 미주 지역에서 위안부 추모비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음. 미국 한인들의 권리신장 운동을 펼치는 한인유권자센터(KAVC)에 이어 뉴욕의 대표적 한인단체가 기림비 확대 노력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기림비 철거 외교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응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음.
- 뉴욕한인회는 10일(이하 현지시간) 팰팍시의 기림비 앞에서 발표한 규탄성명을 통해 "미주 일원의 한인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만행과 학살, 지금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2, 제3의 기림비 건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뉴욕한인회는 "뉴저지에 이어 뉴욕와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에도 기림비를 세워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미국과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한인회는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의결한 사안인데도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의 죄과를 부정하며 기림비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했음.
- 앞서 일본은 히로키 시게유키 주미 뉴욕총영사와 나가세 켄스케 정무담당 부총영사를 지난 1일 팰팍시로 보내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한데 이어 6일에는 자민당 소속 중의원 4명이 같은 목적으



- 로 시청을 찾아가는 등 기림비 철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노골화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기림비를 없애는 대가로 벚꽃길 조성을 위한 벚나무 지원과 도서관 장서 기증, 미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신설,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 등을 제시했음.
- 또 자민당 의원들은 기림비에 당시 위안부의 숫자가 20만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 업자가 운영했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음.
- 팻박의 기림비는 미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3년여 만인 지난 2010년 10월23일 한인유권자센터를 주축으로 진행된 미국 동포들의 풀뿌리 시민운동 결과로 서방권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음.
- 한인유권자센터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 5주년을 맞는 7월31일까지 뉴욕 플러싱 등 미국의 3개 지역에 추가로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러싱의 한인 타운에서는 미국 최초로 위안부를 추모하는 도로인 가칭 '위안부 기림길'을 만들기 위해 시당국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음.

● 한일 정상 "北 핵실험·추가도발 용납못해"(종합)(5/13)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의 핵 실험이나 추가도발 시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통해 대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일본 측 숙소호텔에서 열린 노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두 정상은 또 일본 측이 제안한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등 안보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음. 정보보호협정은 평상시와 유사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자는 것이고, 군수지원협정은 평상시 재난구조 활동 등에서 양국이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인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답에서 "과거사 문제들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어려움도 있으나 지혜를 모아나갈 때 양국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으며 이는 양국뿐 아니라 동북아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이날 회답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맥빠진 회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노다 총리는 회답 말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강한 어조로 요구한 바 있음.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미국 뉴욕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위한 외교적 활동



을 벌이는 등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강경책으로 일관해왔음.

- 이날 한·일 양자회담이 전날 밤늦게 확정된 것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 무성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만큼 이제 일본 측이 성의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美 재무차관 "中 시장주의 개혁 확대 불가피"(5/9)

- 중국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시장주의 개혁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차관이 8일 말했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지난 주말의 미중 경제전략대화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그는 중국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값싼 젊은 노동력이란 이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과 가격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자본 배분과 환율 조정 등에서 시장 요소가 더 작용하도록 스스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 브레이너드는 "싼값에 바탕을 둔 수출 모델이 더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자원 분야에 대한 과잉 투자와 다른 아시아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만만치 않음을 상기시켰음. 그는 "중국 지도부와 대중도 감싸기만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이제는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내수를 늘리면서 유럽 소비에 덜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안 환율에 대해 브레이너드는 지난 2년 달러에 대한 가치가 13% 절상됐다면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환율이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음.

● 美, 中 국유銀 자국銀 인수 첫 승인(5/10)

- 미국은 9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중국 국유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내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음. 또 다른 중국 주요 국유은행인 중국은행과 농업은행도 미국 내 영업망 확대를 승인받았음.
-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날 공상은행이 홍콩에 본사를 둔 बैं크 오브 이스트 아시아(BEA) 미국 법인 지분 80%를 1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음. BEA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모두 13개 지점을 두고 있음. 연준은 공상은행의 자산이 2조 5천억 달러라면서 "이번 거래가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반면 장젠칭(張建淸) 공상은행 회장은 신화통신 회견에서 "중국 본토 은행이 미국 시중은행 대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전례 없는 것으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유은행이 미국 소매은행의 현지 지점망을 갖는 것은 처음임.



- 연준은 이날 또 중국은행의 시카고 지점 설치를 허용했음. 이와 함께 농업은행의 뉴욕 사무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는 것도 승인했음.
- 소식통들은 공상은행의 지분 인수와 중국은행 및 농업은행의 지점망 확대가 지난주의 베이징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칭(陳光誠) 변호사 문제가 돌출됐음에도 전략 대화가 끝난 후 미 측은 중국이 금융개방 확대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음.

● 중국방부장, 美육사에 '손자병법' 기증(5/11)

- 미국을 방문 중인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찾아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기증했음.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량 부장은 10일(현지 시간)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해 도서관에 손자병법,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및 병법 관련 서적 200여권을 기증했음.
- 량 부장은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웨스트포인트 생도 30여명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방미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미중 군사 당국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음. 량 부장은 아울러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의 국방 건설이 거둔 성과를 목도했다면서 이는 자신에게 매우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량 부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르준 제2해병원정군 캠프를 찾아가 각종 전투 장비를 시찰하고 미 해병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스킨십'도 쌓았음. 량 부장은 특히 항공기와 헬리콥터 형태로 모두 변신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탑승해보기도 했음.
- 9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중국 국방부장인 량 부장은 지난 4일 미국에 도착해 지난 7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했음.

마. 미·일 관계

● 日오키나와 주민 69% "미군기지 집중은 불평등"(5/9)

- 오키나와 주민 과반수가 주일미군 기지 중 74%를 이 섬에 배치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이니치신문이 5, 6일 오키나와 주민 828명을 상대로 무작위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미군 기지 집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9%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했음. 전국 1천35명을 상대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33%가 오키나와 기지 집중은 불평등하다고 답변했음.
- 전국 조사대상자 중 67%는 미군 기지를 자신의 거주지 주변으로 옮기는 데 대해 반대했음.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같은 오키나와현의 헤노코(邊野古) 지구로 옮기는 데 대해서도 찬성 의견은 오키나와 11%, 전국 28%에 불과했음.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 중 29%가 '일본 내 다른 지



- 역으로 이전, 39%가 '국외 이전'을 각각 대안으로 꼽은 반면, 전국 조사에서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거론한 이는 12%뿐이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1, 22일 전국 1천565명(오키나와 785명 별도 조사)을 상대로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오키나와 주민 중 50%, 전국적으로는 29%가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응답했음.
 -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오키나와 일본 반환 40주년을 앞두고 이뤄졌음.

● 日, 차세대전투기 F35 4기 6월 도입 계약(5/9)

-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인 F35 4기의 도입계약을 오는 6월에 할 것으로 보임. 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의 F35기 개발담당 책임자인 데이비드 벤렛 해군 중장은 이날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일본이 구입할 4기분의 매매계약 조인이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음.
- 벤렛 중장은 F35기의 최초 계약분 4기의 인도를 2016년 시작한다고 밝혔음. 일본은 모두 42기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최초로 4기를 2017년 3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음.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35 전투기 4기를 기존 제안 내용(가격을 포함한)대로 2017년 3월까지 인도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기의 대당 가격이 89억엔(약 1천270억원)을 넘지 않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푸틴, 美G8 정상회의 불참...메드베데프 보내(종합)(5/1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G8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대신에 새 총리가 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총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음. 백악관은 전화통화 발표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새 러시아 정부의 각료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G8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음.
-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대신 내달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음. 두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재설정(reset)'이라고 일컬어지는 양국 고위급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핵안보와 비확산, 아프가니스탄 문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계 분야의 지난 3년간의 관계진전을 심화시



키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음.

- 한편 10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정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G8 불참을 오바마에 대한 푸틴의 불만 표시로 해석했음. 현대발전연구소 소장 이고리 유르젠스는 "G8 정상회의에서 총리나 부통령을 제대로 환대한 경우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서방 국가 정상들이 러시아의 참석 수준 저하를 정부 구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각 구성은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도 간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음.
- 또 다른 정치 전문가 글레프 파블롭스키는 G8 정상회의에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신 보냄으로써 푸틴 대통령은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추진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과 러시아 야권의 푸틴 취임 반대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뒤늦게 푸틴의 취임을 축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푸틴 美 G8정상회의 불참 배경 두고 해석 부분>(5/1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푸틴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푸틴의 불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G8 불참 결정에 공감했으며 그와 내달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카니 대변인은 이어 푸틴의 G8 불참에 대한 대응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전한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바마가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음. 카니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러 간에) 일련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실망한 것은 아니다"며 "앞서 오바마와 푸틴은 전화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의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고 한달 뒤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카니 대변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이 막 대통령에 취임해 내각 구성 작업을 하고 있음을 잘 이해한다면서 "오바마와 푸틴은 한 달 뒤 만날 것이며 이는 큰 기간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니는 '푸틴의 G8 불참이 오바마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참석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오바마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란 의미임.



- 푸틴 대통령은 앞서 9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대신 새 총리가 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前)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음. 푸틴은 불참 이유로 내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의 불참 결정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추진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과 러시아 야권의 푸틴 취임 반대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과 관련 오바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크렘린 소식통은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푸틴의 불참 결정이 취임식 전에 이뤄졌으며 이 결정이 푸틴의 외교정책 우선 순위와 관련한 전략적 고려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음. 미국이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방문을 미뤘다는 것임. 또다른 크렘린 행정실 관계자도 푸틴의 G8 불참 결정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고 확인했음.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취임 후 사실상의 첫 해외 방문국으로 근년 들어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택했음. 푸틴은 6월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中·러 외교장관 "시리아사태 정치적 해결해야"(5/11)

-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데 공동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음. 양제츠(楊潔攄<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두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아랍연맹(AL)의 코피 아난 특사가 제안한 6가지의 시리아 평화중재안을 지지한다고 확인했음.
- 지난해 3월 시작돼 14개월째 계속되는 시리아 유혈사태로 지금까지 1만 2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엔-아랍연맹은 최근 유엔감시단의 파견을 통한 평화중재안을 제시했음.
- 양제츠 외교부장은 "시리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모든 각 측이 시리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하며 시리아 발전의 길은 시리아 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이어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교전을 멈추고 정치적인 대화를 이룬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일각에서 외부 세력이 시리아 상황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세력이 아난 특사의 평화중재안 실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협의를 위해 10일 베이징에 도착했음.



사. 중·일 관계

● 日정부 "中 정부의 민간토지 취득 관여 않겠다"(5/12)

-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내 민간 토지 매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12일 NHK방송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1일 내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대사관 업무 등을 이유로 대규모 토지 취득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유지 이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대사관 업무 용지 확보 등을 이유로 일본 내에 대규모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민당의 아키바 겐야(秋葉賢也) 의원(중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임.
- 니가타(新潟)시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은 시 소유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작년 12월 민간인 소유의 토지 1만5천㎡를 매입했음. 이에 대해 일본의 보수이익 단체 등은 중국 정부의 광대한 토지 취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외국 정부가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가 국유지가 아닐 경우 사전에 해당국 정부의 의향을 파악할 이유가 없으며, 토지 소유자와 외국 정부 간 교섭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외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한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작년에 외국 자본의 일본 내 산림 매입은 157ha로 전년(45ha)보다 3.5배 정도 증가했음. 외국 자본은 대부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중화권이었으며,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北海道) 임야를 많이 사들였음. 리조트나 별장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것으로 보임.

아. 중·러 관계

● 中 원자바오, 러 메드베데프 총리에 축전(5/9)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후보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음.
- 원 총리는 8일 메드베데프 총리 후보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나아가 메드베데프 총리 후보와 회담을 정례화하고 양국 간에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메드베데프 총리 후보는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8일(현지시간)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리 임명 대통령령에 서명해 정식으로 총리가 됐다.



● "G8 불참 푸틴, 내달 5~7일 중국 방문"(5/12)

-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을 수행해 캅카스 지역의 압하지야 공화국을 방문 중인 대표단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내달 5~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라고 밝혔다.
- SCO는 지난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출범시킨 외교안보 협력기구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 관계자는 "푸틴이 내달 3~4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러-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9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대신 새 총리가 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前)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불참 이유로 내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의 불참 결정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추진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과 러시아 야권의 푸틴 취임 반대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과 관련해 오바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푸틴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 최우선 대상국인 중국보다 미국을 먼저 찾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근년 들어 유례없는 경제 외교적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유엔과 다면적인 협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 中 시진핑 "푸틴 6월 방중 고도로 중시"(5/12)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오는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2일 전했다. 시 부주석은 중러 정상회담관련 협의차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외교적 주요 우선사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시 부주석은 또 "푸틴 대통령이 6월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베이징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이 기구의 새로운 10년을 맞는 시점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이 기구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러는 SCO의 중요한



성원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각 회원국이 SCO를 좀 더 공고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SCO는 2001년 6월 출범했으며 상호 신뢰회복, 합동 군사훈련, 테러와 분리주의 대응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SCO는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2014년 중국에서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음.

자. 일·러 관계

● 日 '쿠릴 2개 섬 우선 반환 협의' 시사(5/7)

- 일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러일 간 쿠릴열도 영토 분쟁 문제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음.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6일 방문지인 모로코에서 동행 기자단에 "(2001년 이르쿠츠크 성명은) 4개 섬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입장에 들어맞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르쿠츠크 성명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와 푸틴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만나 '쿠릴 4개 섬 중 2개 섬(하보마이 제도과 시코탄섬)의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공동선언은 유효하다'고 확인한 성명임. 당시 모리 정권은 2개 섬 우선 반환 협의 방침을 내걸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협의를 벌였지만,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시절 "4개 섬 일괄 반환돼야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본의 입장이 강경해지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
- 최근에는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자 일본이 초조해하고 있음. 겐바 외무상이 이같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협상 물꼬를 트려고 2개 섬 우선 반환 협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됨.
- 겐바 외상은 모리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현재 정계에서 푸틴의 유일한 지기(知己)"라며 "영토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 외교는 초당파로 해야 하는 만큼 (모리 전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차. 기 타

● <中·比 황옌다오 긴장 고조...美 대응 주목>(5/8)

- 중국이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 분쟁과 관련해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나서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림. 필리핀이 사실상 미국을 '배경'으로 한 달째 황옌다오 해상에서 중국과 선박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8일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섰기 때문임. 외견상 이번 황옌다오 사건에 미국은 배제돼 있어 보임.



- 사건의 열개는 지난달 8일 황옌다오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던 필리핀 해양경찰선과 중국 어정선(漁政船·어업 지도선)이 대치하는 것임. 사건 발생 후 중국 측이 현장에 어선 10여 척과 어정선 두 척을, 필리핀 정부는 순찰함 두 척을 추가 파견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변진 지 오래임.
- 이처럼 필리핀 정부가 황옌다오 대치를 포함해 최근 수년째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강공'으로 나서는 것은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미국은 수년 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핵심 이익으로 분류하고서 국제사회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나름 대로 대응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도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사사건건 다투는 양상임.
- 실제 미국은 남중국해가 중동 석유는 물론 국제원자재의 핵심수송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음. 미국은 넓게는 인도,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중국해와 인접한 호주 북부에 미군 기지 설치를 추진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모양새임.
- 미국은 그러면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인 베트남과는 핵 협력 의지까지 비칠 정도로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아울러 과거 동맹이었던 필리핀과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기투합하고 있는 양상임.
- 양국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외교장관 간 '2+2' 안보회담을 통해 해상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가겠다고 약속해 중국을 긴장시켰음. 필리핀은 이 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주권 보호 목적으로 미국에 초계정과 초계기, 레이더시스템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중국 외교부의 푸잉 부부장의 황옌다오 긴장 확대 불사 발언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의 푸잉(傅瑩) 부부장은 이날 알렉스 추아 주중 필리핀 대리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와 필리핀 측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응 강도를 높일겠다고 경고했음. 황옌다오 대치 이후 중국 정부가 필리핀 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임.
- 외교가에서는 푸잉 부부장의 그 같은 발언이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7일 개최된 미중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 황옌다오 갈등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이고 미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됨.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필리핀에 황옌다오 강공을 펴붓고 있다는 추론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황옌다오 분쟁이 특정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인 만큼 '불개입'한다는 입장만 보여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韓中日, FTA 교섭 개시시점 연기할 듯(5/8)

-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개시 시점이 미뤄질 전망이다라고 교도통신이 8일 일본측 통상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한·중·일 3국은 13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3개국간 FTA 교섭 개시에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음.
-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의 FTA에 소극적인데다 일본도 중일 양국간 FTA를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3개국 FTA의 교섭 개시 목표 시점을 '연내'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음.
-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3개국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한 뒤 '연내'라는 목표 시점을 공식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3개국 간 투자 보장 협정에는 서명할 방침임.

● "中, 한국·일본에 따오기 추가 기증" <日언론> (5/8)

-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우호의 따오기'를 기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따오기 한 쌍씩을 기증하기로 했으며, 이달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전망이다.
- 현재 한국과 일본에 서식하는 따오기는 모두 중국에서 기증한 따오기의 자손임.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친교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따오기의 도입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전자를 조사해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개체와 관계가 먼 따오기를 중국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 중국은 '따오기 외교'를 통해 한국 일본과의 유대를 심화하고, 북한 문제와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오기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일본에 광범위하게 서식했지만, 남획과 환경악화 등으로 개체 수가 격감해 멸종 위기에 몰려 있음. 한국은 2008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아 인공번식을 시도하고 있음. 중국이 기증한 따오기 부부는 경남 창원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공부화로 지난해 7마리가 태어나는 등 현재 총 14마리로 늘어났음.
- 일본은 한국에 앞서 1999년 중국으로부터 처음 따오기를 기증받아 인공부화로 200여 마리까지 번식했으며, 최근에는 자연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했음.

● 中항모, 6차 출항...공식 취역 사전작업인듯(5/8)

-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호가 여섯 번째 출항에 나섰다고 환구망(環球網)이 8일 보도했음. 환구망은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바랴그호의 출항 사실을 알렸음. 국제사회가 중국 항모의 활동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탓에 중국 정부가 그와 관련해 보도를 통제하고 있어 중국 매체들이 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



- 하는 경우가 잦음.
- 환구망은 7일 오전 바랴그호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떠나 어디론가 향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국가 해사부문이 서해 북부의 특정 해역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바랴그호 출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 바랴그호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5차 출항한 바 있으며 이번 출항은 복귀 후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임. 바랴그호의 이런 잦은 출항을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조만간 취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음.
 - 바랴그호는 중국이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 달러에 사들인 완성단계의 항모로 그동안 다롄항 조선소에서 개조작업을 진행해왔음. 바랴그호는 매입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부르던 이름이며 중국 해군은 아직 정식 명칭을 정하지 않았음. 바랴그호는 증기터빈 엔진을 갖춘 쿠즈네초프급(6만 7천500t) 항모로 갑판 길이가 302m, 최대 속력이 29노트임. 승무원 2천여 명에 항공기 5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음.
 - 중국은 바랴그호가 '과학연구와 훈련용'으로만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등에 무력시위용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음.

● <韓中日 정상회의 의제 및 전망>(종합)(5/9)

-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함.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彥) 총리가 참석함.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기상 정보 교환 등 정치·외교·경제·사회 현안을 두루 다룬다"면서 "이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문서"라고 말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체결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써 역내 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옴.
-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행사를 문서화 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분쟁해결 절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무역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덜 된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교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음.
- 한중일은 전세계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은 6분의 1을 차지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세번째 경제 규모임.



-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임.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습 체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오고 있어 회담 내용이 주목됨. 중국은 후 주석이 정치·외교를, 원 총리가 경제·사회 등의 분야를 각각 담당함.
 - 이어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열. 여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독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다만 청와대는 의제나 일정상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음. 앞서 지난해 12월 두 정상간 회담에서도 일제강점기 중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비 설치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 전례가 있음.
 -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속문서 2건도 체결함. 정상선언문에는 △한중일 전략대화 강화 △실물분야 협력 증진 △환경·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김. 부속문서는 3국 농업장관회의 정례 개최, 산림관리 관련 대화·협력 체계 구축, 사막 방지화 협력 등을 규정함.
 -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도착하는 12일 한국 경제인 격려 만찬을 진행할 예정임. 3국 정상은 13일 각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오찬에서 각각 연설을 할 계획임.
 -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던 세 나라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했으며, 해마다 3국이 번갈아 개최함. 지난 2011년 9월에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해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조직화를 꾀하고 있음.
- **中 軍실력자 귀보송 부주석 이달 韓日 방문(5/9)**
- 중국 군부의 실력자인 귀보송(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음.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의하면 귀보송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임.
 - 일본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군부의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후진타오 주석 취임 이후 처음임. 귀보송 부주석은 방일 기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과 만날 계획이며, 자위대 기지도 시찰할 예정임.
 - 귀 부주석은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부주석에 이어 중국 군 서열 3위임.
 - 중국과 일본은 귀 부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2010년 발생한 센카쿠 사태와 같은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연락체계 구축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 "日, 中 센카쿠 점령 상정 軍 통합작전 강화"(5/9)

- 일본의 육해공(陸海空) 자위대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중국 점령에 대비한 탈환 작전 등에서 공조를 강화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작년 11월 통합훈련 당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된 것을 상정해 상세한 탈환 계획을 책정했음. 또 중국 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의식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에 의한 요격 능력의 강화책도 검증했음.
- 자위대는 중국의 센카쿠 침공 시나리오를 어민을 위장한 중국 민병의 불법 상륙, 중국의 센카쿠 주변해역 함정 파견 및 공정부대·수륙양용부대 전개, 무력공격으로 인정되는 센카쿠 상륙작전 등의 3단계로 상정했음. 이에 대해 자위대는 육상자위대의 통합 수송 및 기동력 전개, 대함 공격, 자위대와 미군의 시설 방호, 센카쿠 상륙 탈환 등의 5개 작전으로 응진한다는 것임.
- 작년 11월 자위대 통합훈련은 약 3만5천명의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었으며, 규슈(九州) 남부와 오키나와(沖縄) 방면이 주요 훈련 장소였음. 방위성은 지난 2010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확정된 직후 중국의 센카쿠 점령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 훈련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었음.

● "한중일, FTA 실질교섭 연내 개시 합의 전망"(5/10)

- 대만 정치권이 중국 당국에 교도소나 수용소에 갇힌 대만인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대만 집권 국민당과 제1 야당인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인권단체의 교도소 접근과 감시 활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 정치권은 성명에서 "중국 내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대만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음. 성명은 이어 "중국이 대만인을 조사, 재판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방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간 제8차 양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中, 北 피랍의혹 미국인 "수색했으나 못찾았다"(5/11)

- 중국 정부는 10일 중국에 유학 중 지난 2004년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타주 출신의 미국인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31)의 행방을 당시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쓰촨성 청두(成都) 주재 미 총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이 머문 것으로 보이는 윈난성(雲南省)에 그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고 확인했음. 미



- 총영사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당국이 전력을 다해 스네든을 찾았으나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흥 대변인은 설명했다.
-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대표 등은 지난 8일 미 국무부에서 토머스 나이즈 부장관을 면담, 스네든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 북한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 또 일본 산케이신문도 전날 척 다운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전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스네든이 2004년 8월 유학하던 원난성에서 실종됐다며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산케이는 그때 원난성이 탈북자가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경로로 떠오르면서 북한 공작원이 파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 美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5/11)

-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랜드 포브스(버지니아) 의원만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크스 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으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실제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조찬 강연에서 "전술 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



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

- 이에 앞서 로버트 쟈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지난해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 美 대화촉구 속 中·比 외교접촉 재개(5/11)

- 미국이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黃巖島·중국명 황옌다오) 대치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필리핀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양국이 일단 외교접촉을 재개했음.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10일 현지의 중국대사관과 필리핀 외교부 간에 접촉이 이뤄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접촉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측의 새 제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황옌다오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필리핀은 문제를 확대하거나 복잡하게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음.
- 필리핀 외교부의 라울 헤르난데스 대변인도 같은 날 마닐라에서 필리핀은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으며 (스카보러 섬) 대치 상황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현지시간으로 10일 중국과 필리핀이 자제력을 발휘해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 또는 위협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가운데 필리핀 측이 이날 세계 전역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주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규탄시위를 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필리핀 국민과 해외교민은 자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스카보러 섬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정부는 필리핀의 이런 시위가 상황을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아울러 반(反) 중국 시위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하면 폭력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의 자국민에게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음. 또 필리핀 정부에는 중국 공관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음.
- 한편,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과일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가 하면 필리핀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음.

● 미군, 신형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5/11)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하와이 인근에서 신형으로 정밀도가 더 뛰어난 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MDA는 지난 9일 저녁 구축함 '이리 호'가 카우아이 섬에 있는 태평양미사일사격장(PMRF)에서 발사된 단거리미사



일을 탐지·추적하면서 신형요격미사일인 '스탠더드 미사일(SM-3) 블록 1B'를 발사해 요격했다고 밝혔다.

- MDA는 신형 요격미사일에 이색(Two Color) 적외선 추적 기능이 추가됐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목표물들을 더 멀리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종합)(5/12)

-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안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1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라고 각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음.
- 박태호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3국 간 FTA 체결이 무역·투자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종합적·구조적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3국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음.
- 3국 장관은 또한 "우리는 또한 조만간 열릴 3국 정상회의에 FTA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국은 즉각 국내 절차 개시와 실무 단계 협상을 포함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본부장은 "올해는 중일 관계 정상화 4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3국 관계에서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도 "우리가 세계 경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이의 협력은 경험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긴밀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FTA 추진의 의의를 부여했음.
-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음. 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음.
-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됨.
- '연내 협상 개시' 합의에는 일본의 적극적 요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속도를 내자 동북아 경제 주도권 약화를 우려해 대안으로 한·중·일 FTA 조기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임. 일본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FTA까지 성사시키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한편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이 개시되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려 한·중·일 3국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에 더 주력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는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아울러 일각에서는 총리 교체가 잦은 일본이 민감한 FTA 협상에 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FTA 확대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뜩이나 양자 FTA에 비해 복잡한 한·중·일 FTA 논의가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 "中 원자바오, 한반도 긴장완화 촉구" <신화>(5/13)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관련된 각국의 지혜와 인내, 선의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음.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 원 총리는 3국 지도자들이 동북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해당 각국의 이해와 관련돼 있고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이어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에서 냉전의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관련국이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고 인내심을 유지해가면서 갈등 완화를 위해 선의를 보이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음.
- 원 총리는 특히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가야 한다"고 요구했음.

● 한중일 정상 "3국간 FTA 협상 연내 개시"(종합)(5/13)

- 한중일 3국은 13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음.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음.
-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음. 원 총리는 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3국 간 FTA 건설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중일 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음.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음.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인식 아래 서울 코뮌이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음.
-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음.

● 러 사할린 지사 "쿠릴열도 개발에 韓中 기업 참여"(5/13)

-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분쟁을 빚는 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의 개발에 한국과 중국 기업이 참여한다고 교도통신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음. 13일 이 통신에 의하면 쿠릴열도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알렉산드르 호로샤빈 지사는 12일 한국과 중국 기업이 쿠릴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과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에서 인프라 정비와 농업생산에 참여한다고 밝혔음.
- 호로샤빈 지사는 러시아 정부가 쿠릴열도 개발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외국 기업의 참여는 처음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외국기업의 쿠릴열도 투자와 개발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중국 등 외국 기업에 쿠릴열도 개발과 투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일본에도 공동 경제활동을 제안했음. 호로샤빈 지사의 발언은 일본의 참여가 없어도 외국기업을 유치해 쿠릴열도를 개발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은 연내 건설 예정인 이투롭의 해안 벽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 것으로 알려졌음. 사업규모는 14억 루블(약 530억원) 정도임. 쿠나시르에는 중국 기업이 농장을 설립할 예정임.
- 러시아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과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귀속됐다고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전화회담에서 다음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회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노다 총리는 영토문제 등 외교 현안의 논의를 위해 연내 러시아 공식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한중일 정상회의 화두.. '북한·FTA·경협'>(5/13)

-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음.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징후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는 시점에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정책을 조율했음. 또 3국 정상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보장협정을 비롯한 경제 협력 증진 방안도 집중 논의했음.
- ◇ "北, 추가도발 중지해야".. 제재 방안 논의는 없어 = 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중국, 일본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특히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하고, 한·중·일 3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을 강조한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임. 지난 수십 년간 '도발-제재-협상재개'라는 구태의연한 패턴을 끊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는 것임.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응징과 대가'라는 표현으로 결연함을 표시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원 총리는 "북한이 주민 민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노다 총리는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다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비롯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 대외'를 유지하는 한미일과 달리 중국이 입장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문제 포함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북한의 도발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 가정하고 모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음.

-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순탄치는 않을 듯 =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FTA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원 총리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노다 총리는 "매우 큰 성과"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음. 이에 따라 각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 실무 협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중국이나 FTA에 뒤처지면서 경제적 영향력 하락을 우려하는 일본의 이해관계와도 들어맞는 측면이 있음. 일본이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시점을 더욱 앞당기도록 명분화를 요구하면서 공동선언문 작성 시간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실제 체결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중국과는 농산물을 비롯한 민간 품목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고, 일본과는 실익 차원에서 '무용론'도 있기 때문임. 김 기획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병행해서 진행되는 양자간 FTA도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음.
- ◇투자보장협정 체결..ISD 포함 = 3국간 경제 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국내 2만2천개에 달하는 중국 진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투자 관련 법령이나 정보 등을 받고, 법적으로 투자 환경을 보장받는 등 예측 가능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임.
- 안전장치로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포함됐음. 한미 FTA 체결 당시 핵심 논란 조항이었던 이 제도를 폐기하지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무역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음.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액은 502억 달러인 데 비해 중국의 투자액은 37억 달러에 그쳐 정부에서는 이번 협정이 투자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